예비후보 10명중 4명은 전과자

민주당 가장 많아…광주시·전남도당 부실검증 논란

학생운동·음주·사기 등 다양…부적격 후보도 등록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40% 가량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폭행 등 다양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 정당 공천 심사 때 이들의 도덕성 여부 등 후보자 적격 여부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비후보군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예비후보자 검증을 벌였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의 소명만 듣고 검증을 통과시키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주지역 예비후보자 현황에 따르면 5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자는 이날 현재 동구 4명, 서구 5명, 남구 7명, 북구 3명, 광산구 7명 등 모두 26명이 등록했다. 1명을 제외한 25명이 민주당 예비후보다.

이 가운데 서구 2명, 남구 4명, 북구 1명, 광산구 3명 등 전체 예비후보자의 40% 가량인 1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도 있지만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공직선거법위반, 사기·횡령 등도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은 선거법위반 사범의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한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해 버젓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당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범죄 경력에 대해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개인 소명을 듣거나 소명서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허위로 소명할 경우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 허위로 소명한 예비후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사할 때는 범죄 경력에 대한 판결문 전문을 받아보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동구 3명, 서구 8명, 북구 6명, 광산구 13명 등 총 30명이었으며, 남구는 1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 중 민주당이 23명, 민평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민중당 2명이다.

구의회 의원선거는 동구 6명, 서구 19명, 남구 3명, 북구 30명, 광산구 16명 등 74명이 각각 등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이날 현재 전남지사 선거 후보와 기초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212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41.5%에 해당하는 88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 18명 가운데 7명(38.9%)이, 전남도의원 등록자 89명 중 36명(40.4%),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10명 가운데 44명(43.1%)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정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선 후보 선출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광록기자 kroh@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3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소수정당 3당 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공동 대응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지역 광역의회의 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인이나 4인 선거구는 씨가 마르고 있으며, 2인 선거구만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 법률로 다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평화당 '텃밭 공략'

'광주약속 4' 발표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광주지역 공약인 '광주약속 4'를 22일 발표했다.

4대 광주공약에는 '5·18 진상규명'(민주), '고용률 향상과 사회적 약자 생활안정 지원'(민생),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평화), '미투 2차 피해방지'(혁신) 등을 담았다.

최경환 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둔 민주평화당이 광주와 호남에서 지방선거 승리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광주시당은 '광주약속 4'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2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 대회에서 내놓는다. 결의대회에는 최경환 시당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윤영일 최고위원, 천정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 결의대회에 앞서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광주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단 간담회 등 민생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평화당은 지난 20일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최경환 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달 중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 4월 중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2천억 펀드 조성 창업·中企 투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광주빅데이터진흥원 설립 등 '4차 산업혁명 4대 분야 10대 전략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구글·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천억원 혁신펀드를 조성해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구에는 스마트가전 데이터, 동구는 문화 콘텐츠 데이터, 남구는 에너지 데이터, 서구는 공공서비스 데이터, 광산구는 자율주행차 등으로 나눠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 기반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개헌안 통과 후보들 힘 모으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호소문을 내고 "6·13지방선거 후보들 모두 개헌안 통과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새로 담겨 있는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였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염원했던 지방분권과 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중심의 도약시대를 열어주고 있다"고 개헌안을 평가했다. 또 "촛불혁명이 간절히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시민체감형 3대 보육정책 발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2일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3대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민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보육 공공성을 위해 2.7%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 예비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정원충족률이 낮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방식을 통한 국공립 전환 ▲국공립으로 매입 지원액 현실화 ▲지역 보육수요와 여건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 신설 등을 내놨다.

최영호, 교복·엄마수당 등 5개 무상정책 발표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중·고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5가지 무상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공약'을 내놓았다.

5대 무상정책 공약으로 중·고 신입생 30만원 무상교복 지원, 엄마수당 100만원 지원, 중고생 통학버스비 지원, 아이돌봄 사업 자부담 해소, 입대군인 무상 상해보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레저·생활체육 기반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공무원 90% 수준 인상 등을 통해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복지 정책이 우수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혜자 "지방분권안, DJ·盧정부보다 진일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 선언한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됐던 지방분권의 전략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확대와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였다"며 "전날 발표된 지방분권 개헌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국정과제를 진일보 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역시 광주 재정분권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갑석 "평화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지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남북미 정상 합의를 위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이 구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을 비전 카드로 제시했다"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바꾸는 통 큰 구상이며 세계사에 남을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

이정선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 동참을"

이정선(59·전 광주교대총장)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6·13지방선거에 시장, 구청장으로 나서는 후보들에게 광주 교육의 변화를 위해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며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교육청 1년 예산 가운데 1%인 2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시민교육청 설립과 운영에는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장석웅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

장석웅(63·전 전교조 위원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전남지역 교원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들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관련예산은 전액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며 유·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도 대상"이라고 붙였다.

장 예비후보는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